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왜 문제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것이야 우리뿐은 아니지만, 이처럼 나라 전체가 들쭉거리는 것은 우리가 세계 유일의 국가일 것이다. 하기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인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뿐이겠는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세계 유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보기 드문 국가다. 그러면서도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냉전 논리가 여전히 먹혀들어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런 정치사회 현상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검정제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이 수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집필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더구나 저자들이 수정 명령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정치권력이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역사를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앞으로 나올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느 편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따져보는 일은 잠시 미루어놓기로 하자. 어차피 이 책 전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뜨겁고 관점이 크게 엇갈린다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그렇다.’ 한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역사교과서와 같이 인문, 사회 과목의 교과서는 더욱 나쁘다.

나는 정부가 발행하려고 하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는다. 물론 기존의 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말에는 더욱 동의하지 않는다. ‘친일·독재 미화’와 ‘좌편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뉘앙스에 비추어 보면 말이다. 정부나 집권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박한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독재와 친일을 미화할 수 있겠느냐고, 국정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은 한 술 더 뜬다.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나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국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직 집필이 시작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성격을 미리 규정해서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성격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즘 세상에 드러내놓고 독재나 친일을 미화할 리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은근히 독재를

합리화할 가능성이나 친일적 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기존 학계의 한국 현대사 해석이나 교과서 비판에 비추어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따져보기로 하자.

문제는 앞으로 발행될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교과서가 되건 아니건 간에,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건 아니건 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근본적으로 나쁘다. 왜 그런가? 국정제는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집필하건 간에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 해석을 하나로 통일한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해석이다. 역사 해석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이른바 보수학자이건 진보학자이건, 한국사 전공자이건 동·서양사 전공자이건, 역사학자이건 사회과학자이건 간에 역사적 사실이 과학과 같이 객관화된 사실이며 해석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나 국정제를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90퍼센트가 좌편향되었다’는 한국사 전공자

가 아닌 다른 역사 분야 전공자의 말을 빌려보자.

서양사학계 원로인 차하순 교수의 이야기다. 2013년 교학사《한국사》교과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 이를 지지한 분이기도 하다. “역사 지식은 단순히 연대, 인물, 사건 등이 나열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인식이요 자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료 속에 남아 있는 인간의 과거 행위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특별한 사고 형식’이다.”(《역사의 본질과 인식》초판, 학연사, 16쪽) 교육부가 2015년 9월 23일에 고시한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중학교 역사’ 목표) 그러기에 차하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역사 서술이나 역사책도 유일·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나의 특정 관점에 따라 고정된 단일 교과서란 역사에 관한 한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역사 해석은 다양한 시각에 입각하여 제시되며, 그것은 항상 수정을 받게 될 운명에 놓여 있

기 때문이다.”(《역사의 본질과 인식》초판, 학연사, 39쪽)

그런데도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역사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모순이다. 역사 이론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국정화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과서 서술의 기본이 되는 국가 교육 과정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 과정을 만들 때는 내용에만 신경을 썼지 목표를 뭐라고 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과정을 신경 써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서술하는 편이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의 과정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도 아니다. 그저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하면 된다. 물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절차일

따름이다. 이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교과서 발행 제도의 문제를 장관의 고시로 정하게끔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법이나 규정을 만들면서 이처럼 정치적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담당 행정 부서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말로 의외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넌지시 흘렸다. 그런 다음에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앞장섰다. 이 배경에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한 여당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지지하는 데 앞장섰다. 역시 눈치가 빠른 것이 정치인들인가 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여론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높다. 국정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훨씬 커졌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토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진력하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왜 이를 지지하

는 것일까? 나로서는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를 확인할 길은 없다. 물론 이들 간에도 속마음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언론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이나 의도를 이리저리하게 진단한다. 사회에서도 많은 추론들이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배경을 지켜보면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본다. 거기에 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추론해본다. 그런 생각에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들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추론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국정제 논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는 자연스럽게 역사교과서의 발행제도나 성격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로 이어질 것이다.